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 우간다 교육부 및 KUMI대학교 관계자 대교협 방문
- 뉴질랜드 교육기관(Education New Zealand, NZQA) 관계자 대교협 방문
- 지역중심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총회 개최

국회 입법 동향

- 국회 대학 구조조정 대토론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7894, 1907900)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소식

-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등학교 교육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MOU 체결

2014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www.univ.kcue.or.kr

201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수험생 및 학부모, 고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 등에게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대학 입학정보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수험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4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2013. 12. 5(목) ~ 12. 8(일)
COEX(코엑스) 1층 A홀

주 최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준비위원회
주 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EBS교육방송
문의전화 | 02) 6000-1575-6
입 장 료 | 1,000원(고교단체입장 무료)
고교단체관람신청(univ.kcue.or.kr)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BS

✓ 일시 : 2013. 12. 5(목)~12.8(일)
✓ 장소 : COEX(코엑스) 1층 A홀

참가대학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관동대 광운대 국민대 군산대 극동대 금강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천안) 단국대(죽전) 대구대 대전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아대 동양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대 부산외대 상용대 상명대 상명대(천안)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 서울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한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용인대 우송대 울산과기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차의과학대 청운대 청주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협성대 호서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우간다 교육부 및 KUMI대학교 관계자 대교협 방문

- 우간다 교육부 및 KUMI 대학교 관계자는 11월 19일(화) 한국의 경제성장과 고등교육의 역할, 고등 교육 평가 사례 등을 탐색하기 위해 대교협을 방문하였다.
- 이번 방문은 한국의 대학교육을 탐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우간다 교육부 고등교육국 국장(대학 평가위원장), 우간다 KUMI 대학교의 대학의회 위원(university council), 김의환 이사장, 김재현 부총장,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 서민원 대학평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양국 대학교육의 상호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토대로 향후 양 기관은 대학평가 및 고등교육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3.11.19] 우간다 교육부 및 KUMI대학교



[2013.11.21] 뉴질랜드 교육기관[Education New Zealand, NZQ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뉴질랜드 교육기관(Education New Zealand, NZQA) 관계자 대교협 방문

- 뉴질랜드 교육기관(Education New Zealand, 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 관계자는 2013년 11월 21일(목) 한국과 뉴질랜드의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입학자격, 입학시스템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과 향후 교류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교협을 방문하였다.

- 이번 방문은 한국의 대학입학자격 시스템 및 고교졸업 자격기준 등을 탐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Education New Zealand 그랜트 맥퍼슨(기관장)(Grant McPherson, Chief Executiv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카렌 푸타시(기관장)(Karen Poutasi, Chief Executive), 이멧 맥엘허튼(상임 국제정책분석관)(Emmet McElhatton, Senior Policy Analyst International),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이은누리 교육관,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 최창완 대학입학지원실장, 구안규 입학기획팀장, 김정희 연구지원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토대로 향후 양 기관은 고교졸업 이후 대학입학자격 및 고등교육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지역중심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총회 개최



- 2013년 제5차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회장 이찬규) 총회가 11월 21일 오후 한국해양대 양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이근 서울시립대 총장,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 강우경 한국교통대 총장직무대행, 송영무 순천대 총장, 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 태범석 한경대 총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권진택 경남과기대 총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 서만철 공주대 총장, 이찬규 창원대 총장,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 김주성 한국외원대 총장, 이원목 한밭대 총장, 최민선 목포해양대 총장이 참석하였다.
- 한국해양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 총회에서는 '대학 IRB설립 관련 건의사항', '지역중심 국·공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국·공립대 국제화 지표 개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한국대학신문 2013.11.22 기사 인용)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소식]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 마련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학전형 관련 수입 항목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로부터 수수한 입학전형료로 하고,
 -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한다.
 - 수당은 전형료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홍보비로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으며, 홍보비는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지출 상한을 정하였다.

홍보비 지출 기준

-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20%
-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30%
-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40%

- 교육부는 동 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전형료 지출 항목이 정해지고, 특히 홍보비의 지출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대학별로 전형료가 인하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소식]

연금수급 미도래자와 수급자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13.5.1)에 맞추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3.11.22.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201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이후 연금수급 미도래자와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 종전기간 퇴직급여의 개인별 편차 발생 등 연금제도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금개시 미도래자의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기간(매년 7월)별로 현재가치화 하는 과정에서 연금개시 미도래자 중 매년 1~6월에 연금이 개시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기존 수급자와 동일하게 연도별(매년 1월)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도록 하여 연금적용시기에 따른 개인별 유·불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2010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산정 기초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환산기준을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인상률에서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인상률로 변경하였다.
-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한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공·사립 교직원간 제도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연금법 개정이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3.11.22~14.1.2)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소식]

공동 AP과정, 학생 연구활동 및 멘토링 지원을 위한 협력 활성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등학교 교육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MOU 체결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21개 과학고등학교 간 공동 AP과정 도입 등 교육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3. 11. 21(목), KAIST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AP(Advanced Placement): 대학과목 선이수제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KAIST, POSTECH, UNIST, GIST, DGIST

○ 이번 업무협약은 「창의인재 육성 방안('13.8월/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로,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동 AP과정을 과학고등학교로 확대·운영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운영 여건이 조성된 과학고등학교부터 우선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고등학교에 도입되는 공동 AP과정은 대학 수준의 수학·과학 분야의 심화 과목으로, 미적분학, 확률 및 통계, 일반물리, 일반화학실험 등의 과목이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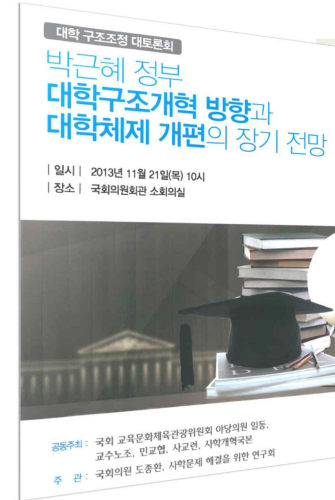
○ 과학고등학교에서 공동 AP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AP과정 활성화를 통해 '3+3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3+3 교육과정: 과학고 3년 교육과정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3년 교육과정

□ 아울러, 이번 협약에는 과학고에서 대학 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 스스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학습할 수 있는 학생 연구활동(R&E)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수에 의한 이공계 진로 멘토링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교육부와 미래부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과학고등학교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의 교육 연계 활성화 등 적극적인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우수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대학 구조조정 대토론회]



대학 구조조정 대토론회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대학체제 개편의 장기전망

[일시 | 2013년 11월 21일(목)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공동주최: 국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야당의원 일동, 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사학개혁국민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주 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과 대학체제 개편의 장기전망 대학 구조조정 대토론회

- 공동주최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야당의원 일동, 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사학개혁국민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 일시 및 장소 : 11월 21일(목),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오전 10시~오후 1시
- 사회 : 박가용(상명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프로그램	
10:00-10:20	인사말 및 축사(신학용 국회의원위원장, 도종환 의원)
10:20-11:00	<p><제1부> 정책키워드: 대학 구조조정 방향은 무엇인가?</p> <p>1.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 배상훈(성균관대, 교육부 구조개혁연구팀장)</p> <p>2. 대학 구조개혁의 장기전망, 윤치환(덕성여대, 사학연 회장)</p>
11:00-13:00	<p><제2부> 생일토론: 대학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p> <p>1. 구조조정과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김혜숙(이화여대, 철학과)</p> <p>2. 부정비리사학 처리문제와 구조조정, 김재훈(대구대 교열회장)</p> <p>3. 지방대학 특성화과 구조조정, 박순준(동원대 교열회장)</p> <p>4. 사학단체를 통한 구조개혁의 정책 문제, 임재환(상명대, 법학자)</p> <p>5.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성과 구조조정, 조희연(인교협 총동대표)</p> <p>6. 대학평가방식의 근본문제와 개선방향, 강홍준(중앙일보 논설위원)</p>
	<종료부본>

□ 대학 구조조정 대토론회가 11월 21일(목)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대학체제 개편의 장기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 교문위 야당의원들과 교수노조, 민교협 등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대학 서열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정비리사학 문제, 대학의 자율적 퇴출, 평가방식 개선 등이 논의됐다.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 배상훈 교육부 구조개혁연구팀장(성균관대 교수)과 윤치환 덕성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교육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 박가용 대학교육연구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배상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연구팀장(성균관대 교수)과 윤치환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장(덕성여대 교수)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패널로는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 김재훈 대구대 교수협의회장, 박순준 사교련 이사(동원대 교수협의회장), 임재환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조희연 민교협 공동대표,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 배상훈 교수는 2020년 이후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고등교육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검토하고 있는 박근혜정부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 대학 소재·특성에 따른 정성평가 도입 △ 등급에 따른 특성화 지원·정원감축 투트랙 전략이 골자다.
- 배 교수는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대학사회의 공감을 호소했으며, 정부와 국회에는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을 비롯해 대학법인 퇴출 경로 마련 등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이에 윤지관 교수는 “모든 대학이 절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나누고 특성에 따라 정성평가한다면 정책적 판단과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나서서 학벌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며 “정원감축 때문에 구조조정을 서두르기보다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비전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재훈 대구대 교수협의회장은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대학은 경영이 부실한 대학이 아니라 비리대학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퇴출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준 교수협의회장은 “사립대의 운영 투명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부터 수반돼야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가능하다”며 “총장 선출절차 투명화를 비롯해 대학평의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사구조조정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희연 민교협 공동대표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평가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으로 학벌 서열구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할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학벌중심체계를 혁파하기 위해서라도 전국 국립대학 10개를 통합네트워크로 만든다든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나 준공립대학을 확장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 최하위 그룹에 속한 대학이 퇴출된 뒤 피해를 받게 될 구성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 윤지관 교수와 임재홍 교수는 “퇴출된 재단이 떠난 사립대 교직원과 학생은 공영 사립대학으로 전환해 편입하거나 주변 국공립대가 흡수하도록 하는 법령을 마련하는 방식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11월 21일자 기사 인용)

[국회 입법 동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94)

○ 발의자 및 발의일자

윤관석의원 등 13인(2013.11.20)

(김상희 김춘진 김태년 박해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정세균 정진후)

○ 입법내용

대학의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소위 ‘시간강사법(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고등교육법 일부)’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또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 간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높음.

더욱이 2014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의 시간강사 해고사태가 예상되어 문제가 심각함.

이 때문에 처우개선의 수혜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울러 대학의 행정당국도 행·재정상 준비도 미흡함.

따라서, 입법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상당 기간 유예하고,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해야 할 것임. 이에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함(안 부칙 제1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00)

○ 발의자 및 발의일자

류성걸의원 등 11인(2013.11.20)

(강길부 김무성 김희국 류성걸 류지영 박성호 성완중 유승우 이만우 이한성 주호영)

○ 입법내용

대학적립금 투자대상에 현행 벤처기업 외에 창업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창업지원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제3호 신설).

‘주간대학교육’ 구독신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주간대학교육’ 발간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한 주간의 대교협 동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소식, 국회 입법 동향, 고등교육 정책 토론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대학교육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교협대외협력홍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919-3825)
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